

한국: 윤 대통령 정부에서 시민 공간이 후퇴하다

2024 년 6 월 20 일, 00:00 GMT

글로벌 시민사회연맹인 CIVICUS 는 2022 년 5 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시민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 특히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표적으로 삼는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브리핑에서 강조된 이러한 조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 한국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 보장하는 국제인권의무에도 위배된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 2 년이 넘는 지금 한국의 언론자유는 악화되어 왔다. 한국은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서 하락했다. 당국은 중앙동양방송(JTBC)과 온라인 뉴스 매체 뉴스타파 등 언론사와 기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였다. 언론사들은 윤석열 정권과 그의 측근들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검열하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2023 년 11 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기소, 특히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 7 조의 지나치게 모호한 표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및 괴롭힘, 협박을 중단하고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 당국은 또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체포하거나 기소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CIVICUS 의 아시아 연구원인 Josef Benedict 는 말했다.

CIVICUS 는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 2 년 동안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노조원들을 강제 연행하였다. 경찰이 노동조합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는 윤 대통령이 노조를 비방하고 위협에 빠뜨리기 위해 노조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의 시위 진압과 국제 인권법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과 조치들에 의한 제재에 대한 우려도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23 년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상당수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국은 노동조합에 대한 낙인찍기, 간섭, 사법적 괴롭힘을 종식시키고, 노동조합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모범 사례를 채택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법 집행 공무원이 시위를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Benedict 말했다.

한국이 2024 년 10 월, 2025-2027 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가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및 세계 민주주의의 옹호자가 되고자 하는 가운데, 국내 시민 자유 수치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의 시민공간은 시빅스 모니터(CIVICUS Monitor)에서 '축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빅스 모니터(CIVICUS Monitor) 정보

20 개 이상의 조직이 CIVICUS Monitor 와 협력하여 모든 대륙의 시민 공간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198 개 국가와 지역의 시민 자유는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여러 데이터 소스를 결합한 방법론에 따라 '폐쇄적', '억압적', '방해적', '축소적' 또는 '개방적'으로 분류됩니다.